

건설동향브리핑

CERIK

제915호
2023. 7. 14

- 건설기업 경영 위기, 정책자금을 활용한 활로 모색 필요
- 건설공사 효율성 제고, 건설기업 손실 예방 위해
직접구매제도 개선 필요
- 폴란드 건설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 방안

건설기업 경영 위기, 정책자금을 활용한 활로 모색 필요

- 정부·지자체 정책자금 내 건설업 소외 여전, 건설업 포함을 통한 경영 안정화 유도 -

■ 건설기업 경영 위기, 사업자금 및 기업운전자금 조달 등 단기적 활로 모색 필요

- 올해 들어 우리 건설산업은 3고(고금리, 고환율, 고물가)로 일컬어지는 세계 경제 악화, 주택건설 시장의 자금난, 건설자재값 및 인건비 상승, 미분양 물량 적체, 건설수주 악화, 대형공사(기술형 입찰 등) 유찰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인 위기를 겪고 있으며, 이러한 어려움은 건설기업에 직격탄으로 작용하여 심각한 경영난까지 발생하고 있는 상황임.
- 국토교통부 건설산업지식정보시스템(KISCON)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6월 말까지 폐업 신고를 한 종합·전문건설업체가 1,787개사로 집계되었으며, 이는 지난 2014년 상반기(2,163개사) 이후 최대 규모이자 작년 동기 대비 약 26%나 증가한 수준으로 파악됨¹⁾.
 - 물론, ①복수 면허 보유 기업의 일부 면허반납, ②업종 전환등록에 따른 기존 면허반납, ③개인사업자의 법인 전환, ④토목건축공사업 신규 취득, ⑤개인사업자 대표자 변경 등으로 인해 행정상 폐업과 실제 도산 등에 따른 폐업 간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작년 4/4분기 이후 실질적인 폐업 기업 수가 증가세를 기록하고 있는 점은 다수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위기 상황을 방증함²⁾.
- 또한, 우리 건설산업의 경우 약 99%에 달하는 기업이 중소기업임을 고려하면, 이러한 위기 상황에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은 더욱 심각할 것으로 예상되며, 사업자금 및 기업 운전 자금 지원 등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현재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위기 상황은 상술한 바와 같이 다양한 산업 내·외부적 요인뿐만 아니라, 개별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역량 등 업체 내부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이해할 수 있으나, 본 고에서는 기업 역량 강화 및 산업 경쟁력 제고 등 장기적 대안보다는 건설기업이 겪고 있는 경영상 어려움을 완화할 수 있는 정책자금 지원 및 이를 위한 개선방안에 대해 살펴보고자 함.

■ 정부와 지자체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 운용 중이나 건설업의 경우 제한적 수혜 및 소외 여전

- 한편, 우리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중소기업을 보호·육성하기 위한 전(全) 산업 차원의 중소기업 정책자금을 운용 중이며, 구체적으로 중소벤처기업부가 운영 중인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³⁾

1) 대한경제(2023. 7. 3.), 상반기 건설사 1787곳 줄폐업...9년래 최대, 신문기사.

2) 전영준(2023. 5. 19.), 최근 건설업 폐업 관련 상세 현황 분석, 건설동향브리핑 제907호, 한국건설산업연구원.

과 지방자치단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⁴⁾으로 구분하여 살펴볼 수 있음.

- 개별 기금별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먼저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경우 크게 ‘혁신창업사업화’, ‘신시장진출지원’, ‘신성장기반’, ‘제도약지원’ 과 더불어 경영 애로에 처한 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긴급경영안정’ 지원사업(자금)을 운용 중이며, 기본적으로 선정기업에 대한 융자사업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음⁵⁾⁶⁾.

<표 1> 2023년도 정부 정책자금 지원사업별 융자계획

구분	업력	지원사업(자금)	신청대상	대출기간(거치기간)	대출한도(억원)	
시설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10년(4)	60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10년(4)	60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10년(4)	60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10년(4)	30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10년(4)	10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10년(4)	60	
		사업전환(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10년(4)	100	
구조개선전용(선제적 자율구조개선)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10년(4)	60			
운전	7년 미만	창업기반지원	전체 중소기업	5년(2)	5	
		재창업	재창업(준비) 기업으로 성실 경영평가 통과기업	6년(3)	5	
	7년 이상	혁신성장지원	전체 중소기업	5년(2)	5	
	무관	개발기술사업화	특히, 정부 R&D 등 보유 기술사업화 추진기업	5년(2)	5	
		제조현장스마트화*	스마트공장 도입 추진기업 등	5년(2)	10	
		Net-Zero유망기업*	탄소중립 기술사업화 기업	5년(2)	5	
		스케일업 금융	회사채 발행(P-CBO)을 통한 자금조달 희망 기업	5년	120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내수수출초보기업(수출10만불 미만)	5년(2)	5	
		수출기업글로벌화	수출유망기업(수출10만불 이상)	3년(3)	5	
		긴급경영안정	일시적 경영애로기업		5년(2)	10
			자연재해, 사회재난 피해기업			
			태풍 힌남노로 피해를 입은 포항 소재 기업			
	사업전환(업력 3년 이상)	사업전환계획 승인(5년 이내)기업	6년(3)	5		
구조개선전용	일반	은행 추천, 정책금융기관 지정 경영애로 기업 등	5년(2)	10		
	선제적 자율 구조개선					

주 : 운전자금 중 (*) 표기 자금은 시설도입 초기 시설가동비(시운전자금)로 순수 운전자금 용도로 대출 불가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2)

3)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3조.
 4) 「지역중소기업 육성 및 혁신촉진 등에 관한 법률」 제8조,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5) 중소벤처기업부(2022), 2023년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계획 공고(공고 제2022-609호)
 6) 개별 지원사업은 세부 사업으로서 (혁신창업사업화) 창업기반지원, 개발기술사업화, (신성장진출지원) 내수기업수출기업화, 수출기업글로벌화, (신성장기반) 혁신성장지원, 스케일업금융, Net-Zero 유망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제도약지원) 사업전환자금, 구조개선전용, 재창업, (긴급경영안정) 재해중소기업지원, 일시적경영애로 지원사업(자금)을 포함하고 있음.

- 다만, 중소벤처기업부 정책자금 지원에 있어 산업별 일부 업종을 용자제외 대상으로 지정 중이며, 건설업 역시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 건설업’ 등 일부 업종을 제외하고는 용자제외 대상으로 지정되어 대다수 건설기업이 정부 정책자금을 활용하기 어려운 환경임.
- 그 결과, 2023년 1분기 정부 정책자금 지원 대상으로 신규 선정된 실적을 살펴보다라도 <표 3>과 같이 다수 제조업종에 해당하는 기업을 위주로 지원이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으며, 건설업의 경우 기타 업종에 일부 포함되어 있을 수는 있겠으나 실질적 수혜 정도는 미미할 것이라 예상됨⁷⁾.

<표 2> 정부 정책자금 용자제외 대상 업종 및 예외

업종 분류	산업분류코드 (KSIC)	용자제외 업종
제조업	33402 中	• 불건전 영상게임기 제조업
	33409 中	• 도박게임장비 등 불건전 오락용품 제조업
건설업	41 ~ 42	• 건설업(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 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 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방진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도매 및 소매업	46102 中	• 담배 중개업
	46331, 3	• 주류, 담배 도매업(단, 주류 중개업 면허보유 기업은 지원 가능)
	4722 中	• 주류, 담배 소매업
숙박 및 음식점업	5621	• 주점업

<이하 생략>

자료 : 중소벤처기업부(2022)

<표 3> 2023년 1분기 업종별 정부 정책자금 지원 현황

구분	금속	기계	전기	전자	섬유	화학	잡화	식료	정보	유통	기타
건수	2,589	2,710	805	900	677	1,566	1,347	1,718	1,646	1,933	2,186
금액(억 원)	6,039	8,118	2,019	1,886	1,478	3,959	2,681	3,330	3,014	4,288	5,329

자료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

- 다음으로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운용현황을 살펴보면,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선정기업에 대한 용자사업 형태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사업(자금) 분야의 경우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계획 공고’에 따라 다양한 목적의 자금을 운용하고 있음.
- 일례로, 충청남도는 조례에 따라 ‘중소기업 창업 지원 자금, 경쟁력 강화 지원 자금’, ‘시장정비사업 및 유통시설 개선 지원 자금’, ‘지역특화산업지원사업 지원 자금’, ‘기업회생 지원 자금’, ‘혁신형 중소기업 지원 자금’, ‘소상공인 지원 자금’과 함께 기업의 일시적 자금 유동성 해소를 통한 경영 안정화를 위해 ‘중소기업경영안정 지원 자금’을 운용 중인 것으로 파악됨⁸⁾.

7)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2023), 정책자금 업종별 지원 현황

- 특히, 중소기업의 경영난 해소를 위한 경영안정자금은 지자체별 상이한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사업 분야에도 불구하고 거의 모든 지자체에서 공통으로 운용하고 있는 지원사업으로, 유동성 확보를 위한 ‘긴급경영안정자금’, 경영 위기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기업 운전자금에 대한 ‘이차보전’, 자재비 및 인건비 등 지급을 위한 ‘경영자금’ 등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형태의 지원사업(자금)을 제공하고 있음.

<표 4>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내 경영안정자금 운용 여부

구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경영안정자금 운용 여부	○	(보증)	○	(이차보전)	○	○	○	○	○
구분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경영안정자금 운용 여부	○	○	○	○	○	○	○	○	

자료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 공고'

- 하지만, 이러한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각종 경영안정자금 지원사업에도 불구하고 건설업의 경우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다수 지자체에서 지원 제외 업종 또는 일부 세부 업종에 한해 지원 가능한 업종으로 지정하고 있어 건설기업이 해당 지원자금의 혜택을 받기는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음.
 - 예를 들어, 전라북도와 전라남도도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에서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며, 대구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북도, 충청남도도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기업으로 볼 수 없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⁸⁾를 대상으로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또한, 부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 경기도, 경상남도도 정부 정책자금과 마찬가지로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 ‘환경설비 건설업’, ‘조경건설업’ 등을 제외한 건설업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으며, 광주광역시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건설업체만을 지원 대상으로 하고 있는 상황임.
- 다만, 한 가지 다행스러운 점은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 실제 건설업을 영위하고 있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⁹⁾ 등을 경영안정자금 사업의 지원 대상으로 포함하고 있어 건설기업이 해당 지원사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점임.
 -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을 포함하고 있으며, 대전광역시, 경상북도, 제주특별자치도는 이에 더해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을 추가적으로 포함하고 있어 해당 지역 건설기업의 경우 신청 및 선정 결과에 따라 경영안정자금을 지원 받을 수 있는 환경임.

8) 「충청남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

<표 5>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의 건설업 지원 현황

구분	지원대상 운영 현황(건설업 한정)	건설업 지원		
		전부	일부	미지원
대전, 경북, 제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업 「정보통신공사업법」에 따른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법」에 따른 소방시설공사업 	○		
서울, 인천	<ul style="list-style-type: none">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		
강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건설업 및 전문직별 공사업(상시고용 5인 이상) 		○	
부산, 울산, 경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용자 지원 제외 업종 포함 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배관 및 냉난방공사업(42201), 건물용 기계장비 설치 공사업(42202), 방음 및 내화 공사업(42203), 소방시설 공사업(42204), 전기 및 통신공사업(423)은 지원가능 업종 		○	
광주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8조 제2항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 승인을 받은 건설업체 		○	
경기	<ul style="list-style-type: none"> 종합건설업의 경우 용자 지원 제외 업종 포함 단, 산업 생산시설 종합 건설업(41225), 환경설비 건설업(41224), 조경건설업(41226), 지식산업센터 건립사업 대상은 지원 가능 기반조성 및 시설물 축조 관련 전문공사업은 지원 제외 업종 		○	
대구, 세종, 충북, 충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 			○
전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원) 			○
전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조업 관련 서비스업, 지식기반서비스산업 등 지원) 			○

자료 : 지자체별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및 동 조례 시행규칙, '2023년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용자지원계획 공고'

■ 경영난에 처해 있는 중소영세 건설기업의 경영 안정화, 정책자금 지원에서부터 출발

- 지금까지의 내용을 정리하면, 우리 건설산업 및 기업의 경우 산업 내·외부적 환경에 따라 어려운 시기에 처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의(일시적) 자금난 및 경영난 해소를 지원할 수 있는 정부와 지자체의 정책자금은 지원 대상으로 건설업 제외하고 있거나 일부 세부 업종만을 포함하고 있어 우리 산업 내 영세·중소 건설기업이 해당 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물론, 서울특별시, 대전광역시 등 일부 지자체의 경우 중소기업육성기금을 활용한 경영안정자금 지원 대상으로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 등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 외 대다수 지자체는 자금 지원 대상에서 건설업을 명시하고 있지 않거나 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어 수혜 대상에서 원천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현실임.
- 이를 고려할 때, 향후 정부와 지자체는 건설산업의 경우 중소·영세 기업이 99%에 달하는 점, 기존 정책자금 지원 제외 업종의 경우 건설업과는 달리 사행산업 등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불건전

제조업, 주점업 등)이라는 점, 지자체별 상이한 지원대상 운영 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현재 소외되고 있는 건설업에 대한 정책자금 지원 대상 포함 여부를 다시 한번 면밀히 재검토·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특히, 일부 지자체에서는 「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통해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의 적용을 받는 제조업, 유통업, 건설업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소기업육성자금 용자 지원계획 공고’에는 실질적인 건설업 영위 기업으로 볼 수 없는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식산업센터 건설사업자’만을 포함하고 있거나, 건설업을 지원 제외 업종으로 정하고 있어 조례의 규정에 맞도록 조속한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 마지막으로 정부의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과 지자체의 중소기업육성기금 지원 대상으로 건설업을 포함하기 위해서는 해당 정책자금이 우리 건설산업을 담당하는 국토교통부나 지자체별 건설산업 담당과(건설정책과 등)가 아니라는 점을 고려하여 해당 정책자금을 담당하는 중소벤처기업부 및 지자체별 기업지원과 등과의 조속한 협의를 통해 개선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함.

이광표(연구위원 · leekp@cerik.re.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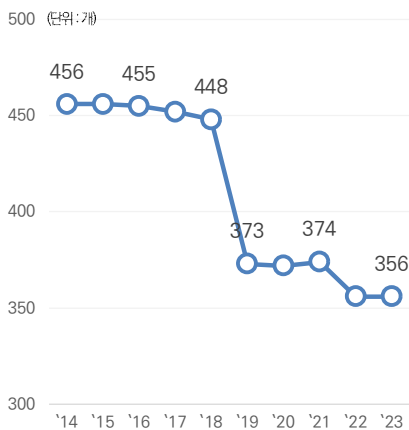
공사 효율성 제고, 건설업 손실 예방 위해 직접구매제도 개선 필요

- 자재 특성 및 공사 여건에 따라 하도급 구매허용, 조정협의회 기능 개선해야⁹⁾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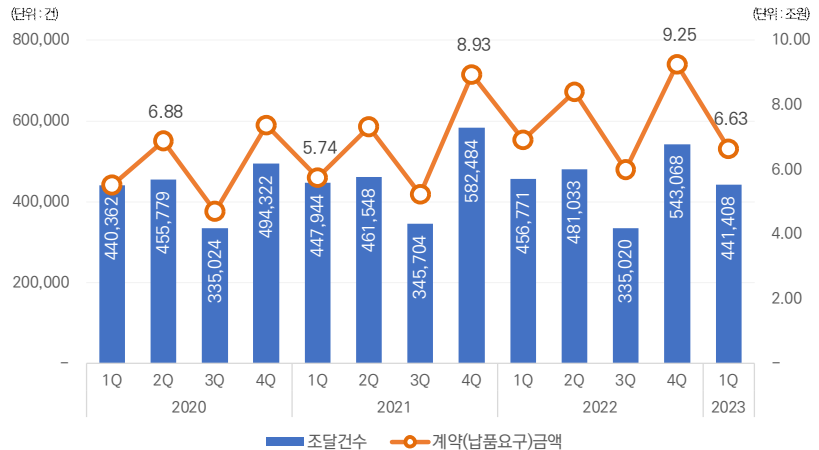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조달, 계약 횟수 및 규모 지속 성장

- 40억 원 이상 종합공사, 3억 원 이상 전문공사 등에 적용되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조달 규모는 최근 3년간 건수와 계약금액 모두 지속 성장 중으로 공공공사에 미치는 영향이 높아지고 있음.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는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을 위한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하위제도로 도입되어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공사에 적용됨.
 - 조달청 기준 '09년~'15년 연평균 계약(납품요구)금액은 15.4조 원이며, '20년 24.4조 원(172만 건), '21년 27.2조 원(183만 건), '22년 30.5조 원(181만 건)으로 지속 증가 추세임.

<그림 1> 공사용자재 대상품목 수



<그림 2> 최근 3년간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조달내역



자료 '공사용자재 대상품목', 공공구매종합정보,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대상 조달내역', 조달정보개방포털.
 주. 직접구매 계약(납품요구)금액으로 실제 조달규모와는 차이가 있으므로 추세 참고용으로 활용.

종합건설기업, 건설공사 효율성 측면에서 직접구매자재 영향 부정적으로 평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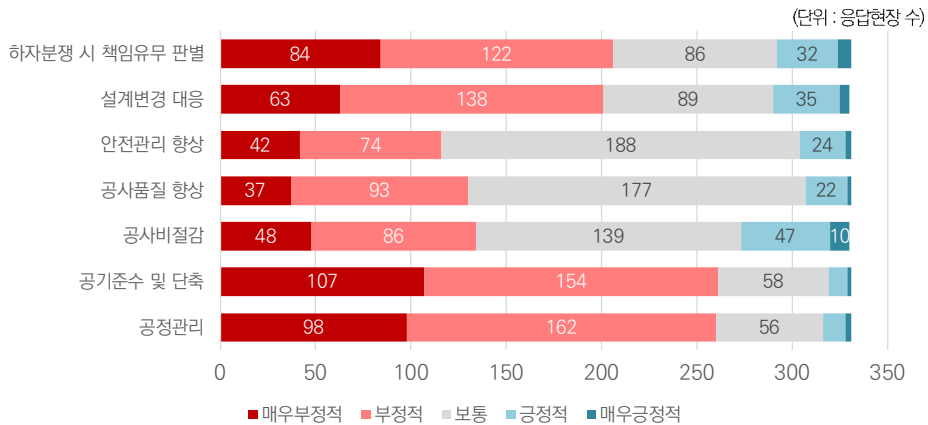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조달규모의 지속적인 성장과 대조적으로, 종합건설기업 현장의 55.3%는 사급자재 대비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조사됨.
 - 대한건설협회를 통해 6월 7일부터 6월 21일까지 직접구매자재 활용 경험이 있는 전국 종합건설기

9) 본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7월 13일 개최한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건전성 제고를 위한 포럼'의 발제내용을 요약함.

업 건설현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진행한 결과, 총 331개 현장에서 응답이 수집되었으며 55.3%(183개)가 직접구매자재의 전반적인 만족도를 부정적으로 평가함.

- 직접구매자재가 공사수행에 미치는 영향 또한 안전관리, 품질향상, 공사비절감을 제외한 나머지 부문에서 부정적 평가가 매우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음(그림 3).
 - ‘공기준수 및 단축(78.9%)’, ‘공정관리(78.5%)’, ‘하자분쟁시 책임유무 판별(62.2%)’ 측면의 부정적 평가가 높았으며, ‘안전관리(35.0%)’, ‘공사품질(39.3%)’, ‘공사비 절감(40.5%)’의 부정적 평가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남.
 - 이는 2016년 대한건설협회 조사¹⁰⁾에서 공사수행 영향에 대한 평가 중 부문별 부정적 의견이 30% 이내였던 점을 감안할 때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평가가 크게 악화되었음을 시사함.

<그림 3> 사급자재 대비 직접구매자재의 공사수행 영향 평가



직접구매자재에 대한 부정적 평가는 공사수행 차질 탓, 종합건설기업 손실로도 이어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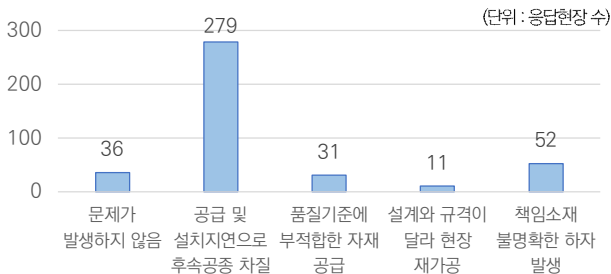
- 설문조사 응답현장의 84.3%(279개)는 직접구매자재의 공급·설치 지연으로 인한 후속공종의 차질을 경험하였으며, 품질·분쟁 관련 차질은 상대적으로 낮았음(그림 4).
 - 전술한 2016년 조사 결과와 비교할 때 직접구매자재로 인한 후속공종 차질은 약 1.8배 증가('16년 47.3% → '23년 84.3%)하였음.
- 또한, 응답현장의 34.9%는 직접구매자재 차질로 인해 공정 변경, 돌관 공사 등을 통한 공정 만회를 위한 비용을 자체 부담한 것으로 조사되어 직접구매자재 차질이 건설기업의 손실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그림 5).
 -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특성상 직접구매자재의 공급에 차질이 발생하더라도 발주처 증용 이외에 자재 납품업체에 대한 별도 조치가 어려우며, 손실규모의 구체적 증빙 등 설계변경 및 공기연장

10) 유위성 외 (2016)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 개선방안 연구, 연구보고서 2016-01, 한국건설산업연구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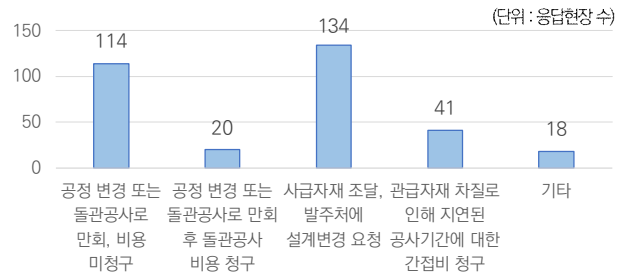
요청에 부담을 가지는 것으로 파악됨.

-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비 청구 현장은 12.5%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음.

<그림 4> 직접구매자재로 인한 공사수행 차질



<그림 5> 직접구매자재 공사차질 대응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의 개선방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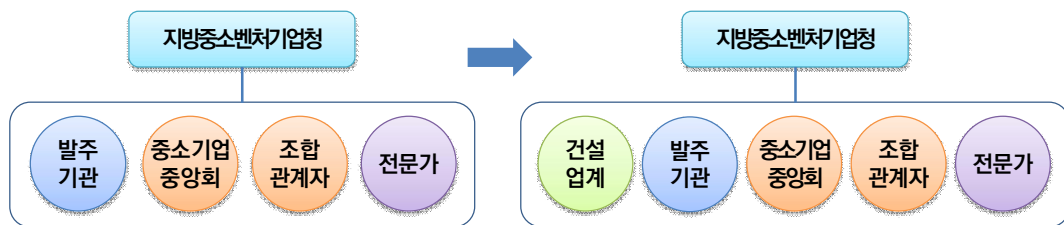
- 직접구매제도는 법령상 공사의 품질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아야 함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건설공사의 특수성 고려가 미흡한 제도의 획일적 적용으로 인해 공사 효율성 저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 현행 직접구매제도는 직접구매자재의 납품지연 등 차질로 공사수행 여건이 악화되어도 구조적으로 건설기업이 별도 관리 또는 피드백 가능한 수단이 부재함.
- 공공공사의 공정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해 자재의 특성 및 공사 여건에 따라 공사용 자재의 원도급(현행 직접구매 방식)·하도급(수급인과 계약) 구매를 허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현행 직접구매제도, 「판로지원법」 및 하위법령상 직접구매 대상 공사용자재의 공급기업은 발주기관의 직접구매(원도급) 계약만 가능하며, 수급인(건설기업)을 통한 하도급 계약은 불가능함. 또한, 공공기관의 중소기업제품 하도급 구매실적 인정불가 등 제약요인이 존재함.
 -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17년 PL창호, 신발장, 주방가구 등 5개 품목을 대상으로 이와 유사한 방식의 '조건부 간접구매 제도'를 시범사업 형태로 추진한 바 있으며 공정 및 품질관리 향상, 우수 중소기업 선별 등의 장점이 확인된 바 있음.

<그림 6> 공사용 자재 하도급 구매 추진 방안



- 하도급 구매 방식은 직접구매시 공사 효율성 저하가 우려되는 자재에 대해 중소기업중앙회 및 물품별 조합이 공급 가능한 중소기업 Pool을 제공하고, 제한경쟁을 통해 수급인(건설기업)이 공급업체를 직접 선정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임.
 - 단,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제도의 취지를 충족할 수 있도록 발주기관이 지정한 단가 수준을 보장하도록 하며, 「판로지원법」 및 관련 고시, 중소기업제품 구매실적 인정절차 등 관련 제도의 개정이 수반되어야 할 것임.
- 상술한 제도개선을 위해서는 공사용자재 직접구매제도를 위한 ‘직접구매 예외 사유 조정협의회’의 기능 확대 및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 함.
 - 경쟁제품 지정 공사용자재의 하도급 구매 허용 시 공사현장 특성 및 수급상황 등을 고려한 하도급 구매 대상 자재 선정까지 기능을 확대할 필요가 있음.
 - 현행 조정협의회는 지방중소벤처기업청, 중소기업중앙회 또는 조합관계자, 공공(발주)기관, 공무원, 학계, 시험·연구기관 등 현장 전문가로 구성하도록 되어있는데, 건설사업관리 전문가 또는 지역 건설협회 담당자를 당연직으로 포함하도록 하여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 지정 공사용자재의 공사 효율성에 대한 검토를 제고하는 것이 바람직함.

<그림 7> 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예외사유 조정협의회 개선 방향



박희대(부연구위원 · hpark@cerik.re.kr)

폴란드 건설시장 현황과 우리 기업 진출 방안

- 신(新) 시장으로의 중요성 부각, 우리 기업의 경쟁력 강화 방안 모색 필요 -

■ 대내외 경제 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인프라 투자 확대 및 지속 전망

- 지난 2004년 유럽연합(EU)가입 이후 ‘△역내 회원국 간 교역 확대, △지속적인 외국인투자 유입, △건설 및 인프라 투자 확대, △EU 기금 지원 등’으로 견고한 경제성장률을 기록함.
 - EU 가입 후 높은 경제성장률을 보였으나 2020년 코로나19 여파로 마이너스 성장률을 기록한 후 안정적인 성장과 내수경기 회복으로 반등하였으나, 대내외 경제 여건 환경 변화(인플레이션 심화, 유로존 경제 성장 둔화 등)로 주요 기관은 올해 현지 경제성장률은 1%를 하회할 것으로 전망함.
- 건설시장 주요 성장 요인으로 ‘△EU 기금을 통한 인프라 투자, △서유럽·CIS·중국 등을 연결하는 물류 요충지, △기업 친화적인 시장 환경, △중동부 유럽국가 중 최대 내수시장’ 등 유럽 연합 지원과 지리적 이점 그리고 정부의 시장 친화적인 정책 마련 및 추진 등으로 평가됨.
 - [EU 지원] 정부는 유럽 기금 지원 금액¹⁾ 중 ‘인프라·기후·환경’ 부문에 절반을 상회하는 1,134억 즈워티(약 34조 200억 원)를 할당하여 자국의 기술 및 사회적 인프라 구축을 추진할 계획²⁾임.
 - [지리적 이점] 동유럽에서 가장 많은 물동량을 처리하는 그단스크(Gdańsk)항과 시베리아·중국 횡단철도 등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물류 거점 국가³⁾로 물류 인프라 개선을 위한 투자를 추진함.
 - [기업 환경] 헤리티지재단의 경제자유지수(IEF) 평가⁴⁾에서 184개국 중 40위로 ‘자유(5가지 등급 중 3번째)’ 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현지 정부는 ‘△최대 15년간 법인세 감면, △전략적 프로젝트 투자 비용의 25% 이상 현금 지원, △5년 이상 부동산세 감면 등’ 다양한 투자 혜택⁵⁾을 제공함.
 - [내수시장] 중동부 유럽지역에서 가장 큰 소비시장으로 평가되며 인구는 3,765만 명⁶⁾으로 EU 회원국 중 5번째로 많고, 1인당 국내총생산과 구매력평가(PPP) 등 생활 수준이 매년 향상되고 있음.
- 향후 10년(2023~32년)간 인프라 개발 필요 투자액은 2,539억 달러로, 분야별로 구분하여 보면 에너지(844억\$)가 가장 크며, 다음으로 ‘도로(559억\$), 통신(469억\$), 수자원(392억

1) 유럽연합(EU)은 7년마다 다년도 재정운용계획(Multiannual Financial Framework)을 수립하여 회원국에 분배하고 있으며, 가장 최근에 수립된 계획(2021~2027)을 보면 폴란드에 분배된 금액은 760억 유로(총 1조 743억 유로 중 7%)로 기금의 최대 수혜국으로 평가됨.

2)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바르샤바무역관(2023. 4. 13.), “폴란드에 쏟아질 EU 기금, 무엇이 있나?”

3) 해양수산부 보도자료(2021. 9. 7.), “동유럽 물류강국 ‘폴란드’ 진출방안, 정부·민간 함께 찾아낸다!”

4) The Heritage Foundation(2023), 2023 Index of Economic Freedom, <검색 일자: 2023. 6. 30>, “△법치주의, △규제 효율성, △정부 규모, △시장 개방성” 등 4개 분야 12개 항목별 점수를 반영하여 등급을 산출함.

5) 산업일보 기사자료(2021. 4. 30.), “30조 원 경제재건 프로젝트 ‘폴란드 수주시장’ 주목”

6) Eurostat(<https://ec.europa.eu/eurostat>), <검색 일자: 2023. 6. 30>

\$)’ 순으로 ‘△발전·송전 및 배전 시설, △도로·교량’ 등에 관한 투자 확대가 예상된다.

- ‘철도·에너지·통신 등’은 필요 투자액과 예상 투자액 간 차이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됨에 따라 인프라 구축 시 민간자본 유치와 함께 민관협력사업(PPP) 발주방식 적용 등을 검토할 것으로 보임.

<표 1> 향후 10년간(2023~32년) 인프라 분야별 누적 필요·예상 투자액 규모

(단위 : 십억 USD \$)

구분	철도	에너지	통신	공항	항만	도로	수자원	합계
필요 투자액 (A)	21.5	84.4	46.9	4.1	1.9	55.9	39.2	253.9
예상 투자액 (B)	8.7	72.5	40.0	1.5	0.5	55.6	39.2	218.0
투자액 차이 (A-B)	12.7	11.9	6.8	2.6	1.4	0.3	0.0	35.9

자료 : Global Infrastructure Outlook, <<https://outlook.gihub.org/>>

■ 신(新)공항·원전·우크라이나 재건사업 등 진출을 위한 적극적인 지원 정책 추진

- 폴란드는 지난 2019년 이래 유럽지역 내 가장 많은 해외건설 누적 수주액(54억 달러)⁷⁾을 기록함에 따라 우리나라 해외건설 주요 시장으로 부상하였으며 중요성 또한 증가한 상황임.
- 우리 정부는 국내 기업의 현지 건설시장 진출 여건 조성을 위하여 지속적인 양국 정부 간 협의를 지속해서 추진 중인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 특히, 현지에서 국가적 프로젝트로 추진 중인 유럽 중동부 지역 최대규모의 신(新)공항 건설사업과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시 우리 기업 참여 방안 마련을 위해 노력을 전개 중임.

<표 2> 우리나라-폴란드 인프라 관련 논의 및 협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폴란드 신공항, 동유럽 최대 복합운송 허브로 키운다 (202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신공항 개발협력에 대한 양해각서」 체결 - 국토교통부가 폴란드 정부와 체결한 교통 인프라 분야 최초의 양해각서 • 인천국제공항공사가 2020년 11월 폴란드 신공항社(Centralny Port Komunikacyjny)로부터 수주한 전략적 자문용역(컨설팅) 계약서 서명식 개최
폴란드 신공항 개발사업 우리 기업 진출 가속화 (2021.12.9)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신(新)공항 개발 관련 양국 협력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 체결 - 신공항 개발에 대한 사업 가치 및 타당성 평가를 위한 정보교환, 실무 워킹그룹 운영 등 공항 부분 협력을 더욱 구체화하고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 - 신공항 건설 및 운영 등 사업의 본격적인 추진 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비롯한 공항 분야 설계·건설·운영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한 국내 기업의 참여 기회 확대 여건 마련
원희룡 장관 “한-폴란드, 신공항 등 인프라 협력강화” (2022.6.2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신(新)공항 협력단과의 면담, 양국 간 인프라 협력 방안 논의 • 신공항 건설사업 추진 시 ‘설계, 건설사업’ 기술력을 갖춘 국내 기업 참여 기회 확대 여건 마련
어명소 차관 폴란드에서 공항·철도 인프라 수주지원 (2023.3.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신(新)공항사업 추진 시 국내 공항·철도 기업의 참여 방안 논의 • 지능형 교통체계(Intelligent Transportation System)·대중교통 분야 등 인프라 협력 강화 방안 논의 • 우리 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을 위한 적극 지원 계획 발표
원희룡 장관,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을 위해 폴란드 방문 (2023.5.2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국·우크라이나·폴란드 민간 분야가 공동으로 개최한 ‘우크라이나 재건을 위한 국제 콘퍼런스’ 참석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폴란드 투자무역청(PAII) 간 업무협약(MOU) 체결 • 우크라이나 재건사업 추진 시 폴란드 역할, 우리 기업의 재건사업 참여를 위한 여건 마련

자료 :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검색일자: 2023. 6. 30>

7) 해외건설종합정보서비스(<https://www.icak.or.kr/>), <검색 일자: 2023. 6. 30>

- 이와 함께, 지난 2021년부터 우리 정부는 현지 정부와 원전·수소 등 에너지협력 강화를 위해 양국 정부 관계자가 참여한 지속적인 협의와 함께 더 나아가 업무협약(MOU)을 추진함.
 - 우리 기업의 폴란드 원전 사업⁸⁾ 참여 여건 조성을 위해 다양한 협의를 추진하였으며, 한국수력원자력은 현지 공기업 및 민간 기업 주도 원전 사업 참여를 위한 노력을 전개 중인 것으로 파악됨.

<표 3> 우리나라-폴란드 에너지 분야 논의 및 협력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한국, 폴란드와 원전·수소 등 에너지협력 강화 (2021.1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전 수주 활동과 함께 수소배터리 등 에너지협력 분야 논의 - 폴란드 에너지 정책 핵심인사인 에너지 인프라 특임 대사와의 면담 - 원전·수소·CCUS·배터리 분야 등 협력 및 양국 에너지 공동위 설립 공동성명 채택 - 한수원-폴란드 전력산업협회(IGEOS) 등 원전 분야 업무협약(MOU) 5건 체결
산업부 장관, 폴란드와 원전·방산·첨단산업 등 협력 논의 (2022.7.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관계부처와 '한수원, 한전기술, 한전원자력연료, 한전KPS, 두산에너지빌리티, 대우건설 등'으로 구성된 팀코리아 폴란드 방문을 통한 첨단산업 분야에서 양국 상호 상생 방안 논의 - 폴란드 기후환경부 장관·하원 부의장 등 주요 인사 면담 - 정부 간 에너지협력 업무협약(MOU), 우리나라(6개)-폴란드(9개) 기업 간 원전협력 MOU 체결(9건) - 양국 기업인 등 300명이 참석한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개최 • 원전협력뿐만 아니라 '배터리 산업, 사회기반시설(SOC) 구축 등 다양한 산업 분야 협력방안 논의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보도자료), <검색 일자: 2023. 6. 30>

- 지난 2022년 현지에서 개최된 「한국원전과 첨단산업의 밤」 행사에서 우리나라와 폴란드 원전 관련 기업 간 총 9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음.

<표 4> 우리나라-폴란드 기업 간 업무협약(MOU) 개요

구분	분야	체결 기업·기관		주요 내용
		우리나라	폴란드	
1	엔지니어링	한국수력원자력	ILF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폴란드 원전 사업 공동 참여 • 공급망 구성 • 현지화 협력 • 연구개발(R&D) • 제3국 진출 협력
2	전기		BAKS	
3	기계		RAFAKO	
4	엔지니어링	한국전력기술	ZRE	
5	기계·전기	두산에너지빌리티	ZARMEN	
6	건설	대우건설	Polimex Mostostal	
7	엔지니어링		EPK	
8	건설·엔지니어링	한전KPS	Ethos Energy	
9	엔지니어링	한국원자력원료	MMH	

자료 : 산업통상자원부 보도자료(2022.7.1), "산업부 장관, 폴란드와 원전·방산·첨단산업 등 협력 논의"

- 다만, 2022년 10월 현지 정부주도 원전 사업은 미국 원전업체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가 AP1000 기반 기본설계(Front End Engineering Design, FEED) 수주를 공식화⁹⁾함.
 - 일본의 도시바(Toshiba)는 벡텔(Bechtel)과 웨스팅하우스(Westinghouse) 팀에 합류하여 벡텔에 '△증기 터빈, △발전기 및 서비스' 등을 공급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됨.

8) 지난 2021년 2월 폴란드 정부는 2043년까지 총 6기(2개 부지 각 3기, 약 40조 원 규모) 원전건설 계획 등을 반영한 「2040 에너지전략」을 승인하였으며, 2023년 사업계약 체결을 통해 2033년 1호기 준공과 2043년 총 6기 건설을 완료로 목표로 함.

9) 메리츠증권 Issue Comment(2022. 11. 1), "원자력-폴란드 원전, 오래 걸린 만큼 큰 한 걸음"

■ 외국 건설기업 참여 비중이 높으며, 우리 기업 또한 적극적인 진출활동 전개 中

- 현지 건설시장에서 활동 중인 주요 건설기업¹⁰⁾은 ‘△Budimex(폴란드), △Ferrovia(스페인), △Mota-Engil(포르투갈), △Skanska(스웨덴), △Salini Impreglio(이탈리아), △Strabag SE(오스트리아)’ 등으로 외국기업의 시장 진입 장벽은 낮은 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음.
 - 현지 기업을 제외한 외국기업 국가별 건설 시장 점유율을 살펴보면 오스트리아(14%)가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탈리아·스페인(5%), 터키(4%), 포르투갈·독일(3%)’ 등의 순으로 파악됨.
- 다만, 현지 최대규모 건설기업으로 다양한 건설기술과 사업수행 실적을 보유하고 있는 ‘부디멕스(Budimex)’는 스페인 대형 건설기업인 페로비알(Ferrovia)이 지분의 과반¹¹⁾을 보유함.
 - 지난 2000년 스페인 건설기업인 페로비알(Ferrovia)은 해외사업 확대 전략의 하나로 부디멕스(Budimex)의 지분(36.7%)을 인수¹²⁾하였으며 이를 통해 현지 건설시장에서의 주도적 지위확보와 함께 체코, 슬로바키아 등 인접 국가 진출을 위한 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 건설·엔지니어링 전문지(Engineering News Record)의 국가별 기업 진출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시공은 ‘터키기업’이 엔지니어링은 ‘미국기업’이 가장 많이 진출한 것으로 파악됨.
 - [시공기업] 현지 진출기업¹³⁾은 46개社로 기업별 국적을 보면, 터키(7개)가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대한민국·스페인·이탈리아(5개), 중국(4개), 프랑스(3개)’ 등의 순으로 우리 기업은 ‘△GS건설, △SK에코플랜트, △포스코이앤씨, △현대건설, △현대엔지니어링’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엔지니어링기업] 현지 진출기업¹⁴⁾은 54개社로 기업별 국적을 보면, 미국(18개)이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프랑스(5개), 스페인(4개), 네덜란드·영국(3개)’ 등의 순으로 미국과 유럽 기업의 진출이 활발한 상황이며 우리 기업은 ‘△희림, △유신’이 활동 중인 것으로 나타남.
- 지난 2020년 GS건설은 글로벌 Prefab 사업 진출을 목표로 유럽 시장 내 포지셔닝 선점을 위해 현지 목조 모듈러 기업인 단우드(Danwood Holding S.A)를 약 1,800억 원에 인수¹⁵⁾함.
 - [피인수 기업 특징] “Danwood Holding S.A는 폴란드 생산의 원가경쟁력을 바탕으로 자국뿐만 아니라, ‘△독일, △영국, △스위스 및 오스트리아’ 시장에 단독주택을 공급”하는 수출모델 보유기업으로 독일 Turn-key Prefabrication 주택 시장 점유율 1위(2018년 기준)를 기록함.
- 또한, 2021년에는 현지에서 가장 활발히 사업을 수행 중인 현대엔지니어링이 현지 최대 건설기업인 부디멕스(Budimex)와 전략적 협력 관계 구축을 위한 협약¹⁶⁾을 체결함.
 - 이를 통해 현지 영업력 강화와 함께 사업수행 위험 절감 등의 기대효과가 예상되며 현지에서 추진되는 정유·석유화학 플랜트, 에너지, 인프라 등의 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를 추진하는 것으로 파악됨.

10)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바르샤바 무역관(2020. 5. 8), “폴란드 건설사업”

11) 페로비알(Ferrovia) 지분율은 50.14%로 파악됨. Budimex 홈페이지(<https://www.budimex.pl/>), <검색 일자: 2023. 6. 30>

12) Ferrovia(2020. 4. 6), “Ferrovia acquires 36.68% of Budimex, one of the most important construction firms in Poland”

13) Engineering News Record(2022), “The Top 250 International Contractors list”

14) Engineering News Record(2022), “The Top 225 International Design Firms list”

15) GS건설(2020. 1. 21), “영업양수결정(자율공사)(중속회사의주요경영사항)”

16) The GURU 기사자료(2021. 8. 16), “현대엔지니어링, 폴란드 EPC업체와 파트너십... 현지 인프라시장 정조준”

■ 우리 건설기업 현지에서 다수 프로젝트 참여 및 수행 경험 보유

- 지난 2019년¹⁷⁾ 이후 우리 건설기업의 주요 프로젝트 수주 현황에 관한 조사 결과 현대엔지니어링이 총 3조 4,422억 원(3건)으로 가장 많은 수주액을 기록하였으며 다음으로 ‘포스코이앤씨(4,857억 원, 1건), 두산에너지빌리티(2,200억 원, 1건)’ 순으로 파악됨.
 - 현대엔지니어링의 「PKN Olefins Expansion Project (EPC)」는 현지 최대규모 석유화학 플랜트 건설 사업으로 스페인의 테크니카스 레우니다스(Técnicas Reunidas, TR)와의 컨소시엄(지분율 55%)을 구성해 참여한 사업으로 특히, 듀얼피드(Dual FEED) 계약자로 기본설계(FEED) 수행 후 EPC 입찰 경쟁을 거쳐 기본설계 및 사업수행 역량을 인정받아 ‘Dual FEED&EPC 입찰¹⁸⁾’ 수주에 성공함.
 - 포스코이앤씨(前 포스코건설)는 지난 2012년 우리 건설기업 최초의 동유럽 대규모 공공프로젝트 수주 성공 사례로 평가되는 「크라쿠프 생활폐기물 처리 열병합 발전소」 사업의 성공적인 수행(2016년 올해의 건축물상 수상)을 통해 우리 기업의 현지뿐만 아니라 동유럽 지역 국가 진출 여건을 마련¹⁹⁾함.

<표 5> 우리 건설기업의 주요 현지 프로젝트 수주 현황 및 내용

(단위: 백만 원)

기업명	프로젝트명	발주처	계약액	계약기간
두산에너지빌리티	폴란드 Olsztyn WtE EPC 프로젝트	Dobra Energia dla Olsztyna sp. z o.o.	220,000	2020* 2023*
포스코이앤씨	바르샤바 소각로 EPC**	MPO(바르샤바 시 산하 폐기물 관리공사)	485,729	2022. 11* 2029. 01*
현대엔지니어링	Polimery Police PDH/PP Project***	GRUPA AZOTY POLYOLEFINS SP. A.	1,508,525	2019. 05. 11 2023. 08. 31
	PKN Olefins Expansion Project (EPC)	POLSKI KONCERN NAFTOWY (PKN) ORLEN	1,587,687	2021. 06. 22 2025. 03. 07
	SK넥실리스 폴란드 공장 신축공사	SK넥실리스 폴란드 법인	345,980	2022. 07. 27 2024. 09. 27

* 기업별 자료에 관한 조사 결과 두산에너지빌리티는 ‘연도’, 포스코이앤씨는 ‘연도와 월’ 정보만 제공함.

** 현지 최대규모의 폐기물 소각로 사업

***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KIND)는 「플랜트 및 터미널 인프라 건설운영 사업」에 ‘지분증권 주주대여’ 형태로 투자²⁰⁾함.
자료 : 현대엔지니어링, 사업보고서(2023.3.30); 포스코이앤씨, 사업보고서(2023.3.10); 두산에너지빌리티 증권신고서 기업실사(2022.9.23)

- 2023년 6월 도화엔지니어링·국가철도공단(KR) 컨소시엄(도화 : 80%, KR : 20%)은 우크라이나 재건사업의 한 축으로 평가되는 「폴란드 카토비체-국경-오스트라반 구간 철도 설계」 사업(총 432억 원 규모)을 수주하였으며 주요 계약 내용은 다음과 같음.
 - 국가철도공단(KR)의 풍부한 고속철도 사업관리 경험과 도화엔지니어링의 설계 역량을 기반으로 선진 엔지니어링 기업(프랑스, 스웨덴 등)·현지 기업과의 치열한 경쟁을 통해 수주한 사업으로 향후 발주될 폴란드와 주변국의 철도사업에 대한 우리 기업 진출²¹⁾교두보를 마련한 것으로 평가됨.

17) 지난 1997년부터 현재까지 수주액에 관한 조사결과 2019년(15.4억 달러) 처음으로 10억 달러 규모 이상의 수주액을 기록한 것으로 파악됨에 따라 해당 시점을 기준으로 주요 수주 프로젝트에 관한 조사를 수행함. 해외건설 종합정보서비스 <검색 일자: 2023. 6. 30>

18) Dual FEED&EPC 입찰이란 “기본설계 노하우와 프로젝트 수행 역량, 고도의 설계 역량을 비교해 가장 적합한 라이선서를 선정하는 입찰방식을 의미함; 아시아경제 기사자료(2022. 12. 22.), “[다시 뛰자 K건설]기본설계 수행역량 앞세워 ‘글로벌 무대 진출’

19)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2018. 12. 31), “EU 기금을 활용한 유망 프로젝트”

20) 한국해외인프라도시개발지원공사(<http://www.kindkorea.or.kr/>), <검색 일자: 2023. 6. 30>

<표 6> 카토비체-국경-오스트라바 구간 철도 설계 사업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체결계약명	THE DEVELOPMENT OF DESIGN DOCUMENTATION FOR THE PROJECT "CONSTRUCTION OF THE RAILWAY LINE ON SECTION KATOWICE STATE BORDER OSTRAVA"
계약금액	33,505,446,648원
계약상대	폴란드 신공항공사(Centralny Port Komunikacyjny, CPK)
판매공급지역	폴란드 카토비체-국경-체코 오스트라바 구간
계약기간	2023. 6. 19 ~ 2030. 11. 19 (89개월)
기타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본 사업은 폴란드 신공항과 주요 거점도시를 연결하는 고속철도 건설사업의 일환으로 전체 1,800km 구간 중 88.4km 구간인 카토비체-국경-체코 오스트라바 구간 설계 등을 수행하는 사업임. 본 사업은 KR(국가철도공단)과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참여하는 사업으로 총계약 금액은 PLN 133,782,049이며, 이 중 80%에 해당하는 PLN 107,025,639이 당사의 계약금액임.

자료 : 도화엔지니어링, 단일판매-공급계약체결(2023.6.20)

■ 해외건설 신(新)시장으로의 중요성 부각, 진출 시 면밀한 조사와 검토 필요

- 타(他) 산업 분야 국내 기업의 활발한 현지 진출과 함께 우리 건설기업은 다수의 대규모 프로젝트를 성공적으로 수행함에 따라 우리나라와 기업에 대한 현지 신뢰도는 매우 높은 상황임.
 - 그간 우리 기업의 진출 노력과 정부의 적극적인 진출 지원에 힘입어 현지 건설시장에서의 입지를 강화한 것으로 보이며 이를 기반으로 향후 더욱 유의미한 성과²²⁾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함.
- 앞서 전술한 바와 같이 외국기업의 현지 시장 진출 시 제도적 장벽은 낮은 상황으로 보이나, 원활한 건설사업 수행을 위해 다음과 같은 사항에 관한 우선적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표 7> 폴란드 건설시장 진출 시 주요 고려사항²³⁾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건설 면허 관련 제도 부재함에 따라 사업등록 시 "건설업 혹은 유사사업"으로 등록 후 건설공사 수행 가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단, 건설사업 수행 시 공종별 면허증(자격증)보유 인력(Site Manager)이 상주하여 "Daily/Weekly/Monthly Report"를 작성하여 정부 기관에 제출해야 함. ● 입찰서류 단계 작성부터 공사수행 전(全) 과정에서 현지어(폴란드어) 사용으로 인한 전문가 확보 필수 ● 건설공사 수행 시 FMV (felelős műszaki vezető)* 채용 필요(공사 관련 서류 FMV 서명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우리나라 건설공사 체계에서 비추어 보았을 때 "Field supervisor"로 해석할 수 있음. ● 공사 계약 시 독소조항에 관한 면밀한 확인과 검토가 필요하며 계약단계부터 공사 완료 시점까지 국제 변호사 참여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현지의 다양하고 복잡한 규제에 관한 충분한 사전 인지와 이에 관한 대응 검토 등 필요 ● 현지 기술인력의 전문성이 국내와 비교 시 현저히 낮은 상황으로 TCN (Third Country National)* 투입 검토** 필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3국 인력(필리핀, 대국, 인도 등)을 의미하며, TCN Work Permit 발급이 까다롭지 않음.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전에는 우크라이나의 저렴한 기술인력을 활용하였으나 최근에는 TCN 활용이 유리함.
--

장현승(서울과학기술대학교 건축학부 교수, jang@seoultech.ac.kr)

김가현(서울과학기술대학교 U-건설관리공학연구소 연구원, kimgh.21@seoultech.ac.kr)

김화량(부연구위원, hrkim@cerik.re.kr)

21) 국가철도공단 보도자료(2023. 6. 22), "4백억 원 규모 폴란드 고속철도 설계용역 수주"

22) 우리 정부는 폴란드 인프라부 및 우크라이나 개발협력 전권대표와 '①「한-폴란드 교통인프라 개발 협력 MOU」(△폴란드 및 중·동유럽지역 교통 인프라 개발, △항공을 포함한 교통 분야의 양국 간 협력강화, △중·동유럽의 동-서 및 남-북 교통축 개발), ②「한-폴란드 우크라이나 재건 협력 MOU」(△우크라이나 재건 및 개발 프로젝트 협력,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 국토·도시·인프라 계획 협력, △양국의 공공·민간기업 간 교류 및 협력 확대)' 2건의 업무협약(MOU)을 체결함. ; 국토교통부 보도자료(2023. 7. 13), "인프라 개발 및 우크라이나 재건 지원을 위한 한국-폴란드 협력관계 강화"

23) 현지 건설사업 수행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한 인터뷰를 통해 관련 사항에 관한 조사를 수행함.